

言論報道事項

2012. 06. 29(金) 朝刊

關聯報道 · 爭點社說

<소방방재청 관련 보도>

- “물놀이 안전 지킨다” 광주 119시민구조대 연합뉴스
- 안전사고 경보 조선,아시아투데이
- 가뭄 끝, 내일부터 ‘장마 시작’...해갈에 큰도움 각언론사
- 하수처리수 ‘가뭄 극복 구원투수’로 경향신문
- “가뭄피해 보상해 달라” 첫 신고 서울신문
- “100년 만의 폭우 문제없다”...과연? TV조선
- “비상사태” 선포에 6000명 일사불란 서울신문
- 황령터널서 ‘아찔한’ 화재...대형사고 날 뻔 KBS뉴스
- 닥터헬기 고장 나 이송 지연, 환자는 숨져 연합,매일,중앙
- 응급실 당직, 레지던트 대신 전문의 KBS뉴스
- 경기북부에도 ‘석해균 프로젝트’ 가동 조선일보
- 가을같은 아침 저녁 날씨 왜 알고보니 ‘일교차의 마술’ 중앙일보
- 日 사고위험도 높은 원전, 한국의 동해쪽에 몰려 각신문사

<행정안전부 관련 보도 외>

- “세종시가 국가 주요 의사결정 중심축 될 것” 조선일보
- 한.일 군사협력 논란 끝에 첫발 중앙일보
- 인천, 태백, 부산, 대구 재정위기 지자체 ‘경고’ 매일경제
- 하나된 청주.청원 도시 경제력 10위→4위로 중앙일보
- 만삭의사부인 살해 대법 “증거 불충분” 동아일보

인천소방안전본부,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news1

(인천=뉴스1) 정영선 기자= 인천소방안전본부는 다음달 2일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구조대원과 시민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발대식은 인천지역 주요해수욕장 중 처음으로, 해수욕장 안전을 책임질 119구조대원,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소방·구청·해경·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119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의 합동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소방헬기, 공기부양정, 고무보트, 제트스키 등을 동원한 수난 인명구조 시범과 심폐소생술 시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을왕리, 십리포, 서포리, 동막해수욕장 등 인천지역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소방공무원 64명, 자원봉사자 238명이 동원돼 수난사고자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계도 및 순찰, 심폐소생술 체험교실 운영,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담당한다.

jj2030@news1.kr



"물놀이 안전 지킨다" 광주 119시민구조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송산유원지, 황룡강 등 6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난구조관련 자격자와 업무 종사자로 구성된 구조대는 구조요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 등 142명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지도 활동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위급시 구조활동을 벌이거나 119대원들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cbebop@yna.co.kr

朝鮮日報

2012년 06월 29일 금요일
A32면 오피니언

안전사고 경보

강한 햇볕 아래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 쉽게 피로해진다. 심하면 체온 조절 능력

이 떨어져 탈진·일사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산행 등 야외 활동시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제공

아시아투데이

2012년 06월 29일 금요일
006면 사회



안전, 이것만은 꼭! 야외활동시 탈진·일사병 조심 또 조심!

강한 햇볕 아래서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체내 수분이 부족하여 쉽게 피로해 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져 탈진·일사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산행 등 야외 활동시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오랜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가뭄 끝, 내일부터 '장마 시작'..해갈 큰 도움

◀ANC▶

목타는 가뭄과 때이른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드디어 내일부터 장맛비가 내립니다.

다음 주에도 비가 자주 내려서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윤태 기자입니다.

◀VCR▶

장마전선을 가로막던 빗장이 풀렸습니다.

이달 내내 버티던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물러나면서 장마전선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와 전남 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주말인 모레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벼락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일요일에 차츰 개겠습니다.

지난달 이후 비 부족량은 전국 평균 164mm 정도.

이번 비가 서울·경기와 영서·충남 서해안 지방은 20에서 최고 120mm 이상 쏟아질 걸로 보여 해갈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 밖의 지방은 10에서 40mm로 다소 미흡하겠습니다.

◀INT▶ 김성욱 예보분석관/기상청

"이번 비가 충청 내륙과 남부 지방에서는 다소 적겠지만 앞으로는 비가 자주 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뭄은 차츰 회복 단계로 접어들겠습니다."

다음 주는 초반에 제주와 남해안, 후반에는 전국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홍콩으로 가고 있는 6호 태풍 독수리의 막대한 수증기가 장마전선을 키울 수 있어 큰 비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태입니다.

내일 장마전선 북상...최고 120mm "해갈 도움"

<앵커 멘트>

'마른 하늘에 단비' 같다는 건, 이런 뉴스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드디어 내일,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해갈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기상청 예보실, 긴장감 속에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반도 남쪽에서 일본 남부까지 길게 이어진 장마전선에 이상징후가 감지됐습
니다.

한동안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본격적으로 북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컴퓨터 예측 결과 내일 아침 제주와 전남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중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내립니다.
특히 토요일인 모레는 새벽부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지방으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요일까지 예상강우량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이 20에서 70, 최고 12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지난달 이후 강우량이 예년보다 평균 150mm 정도 적은 상황,

이번 비로 해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많은 비로 일부 피해도 우려됩니다.

<인터뷰> 김성묵(기상청 예보분석관) : "특히 강한 비구름이 주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면서 토요일 오전부터는 한 시간에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일요일 오전에 남부지방은 밤에 그치겠고, 다음주엔 장마전선이 주로 남부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황폐한 저수지...장맛비 소식에 '희망'

<앵커>

논밭이 짹짹 갈라지고 메마른 저수지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농민들은 아무 것도 할수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29일)단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벌써 희망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물 빠진 저수지 수초 위에 폐사한 잉어들이 둥둥 떠있습니다. 어림잡아도 50마리가 넘습니다. 불별더위에 이미 부패한 물고기도 적지 않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붕어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물밖으로 나온 동자개는 날짐승의 먹이가 돼 머리만 남았습니다. 개구리와 뱀도 겨우 형체만 남았습니다. 모내기로 물이 줄던 저수지는 한 달 이상 비가 오지 않아 이처럼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낚시꾼들로 붐비던 저수지가 오랜 가뭄 끝에 황폐해진 것입니다.

[주민/태안 원북면 : 가물치도 있고, 장어도 있고, 붕어있고, 잉어도 있고 다 있죠. 낚시꾼이 아주 짹 차요.]

물기 없는 논에는 벼포기가 자라지 못한 채 누렇게 말라 올해 수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4만 9000ha의 논과 6100ha의 밭이 가뭄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뭄의 와중에도 농민들은 주말 장맛비 소식에 다시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밭에 물을 뿌리며 콩을 심느라 분주합니다.

[전춘래/농민 : 내일 비온다고 해서 콩을 파종하는 중이에요. (왜 아직까지 못 심었어요?) 비가 안 와서요.]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100mm 이상 비가 내려야 어느 정도 해갈이 가능한 상태여서 이번 주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하늘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내일 남부지방부터 '단비'

TV조선

[앵커]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드디어 내일부터 주말까지 내립니다. 지역에 따라 거센 빗줄기도 예상되는데, 가뭄 뒤 내리는 비는 홍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해 대비 하셔야겠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는 내일 오후부터 제주와 전남에서 시작돼 점차 북상합니다. 밤부터는 충청 지역에 비가 내리고 서울과 경기지역에는 자정 무렵부터 비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하룻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은 5에서 10밀리미터, 중부지방은 5밀리미터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인 토요일부터는 경상도와 강원도에도 비가 내립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의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 지역 20에서 70 밀리미터, 많은 곳은 최고 120밀리미터 이상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밀리미터가 예상되고 북한 지역도 50에서 200 밀리미터의 비가 전망됩니다.

지역에 따라 거센 빗줄기도 예상 돼 수해 대비도 필요합니다. 가뭄으로 마르고 약해진 땅에 갑자기 많은 비가 오면 물이 땅에 쉽게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태수 / 기상청 예보관

"모레 오전에 중북부 지방과 충남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장마 전선이 물러나면서 비가 그치겠지만 다음주 목요일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한 차례 더 비가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진희입니다.

반갑다 장마... 오늘 남부 지방부터 비

내일 전국 축축... 해갈엔 부족

본격적인 장마가 29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한반도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장마전선이 활성화됐다”며 “29일 낮부터 제주와 전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부터 강수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은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를 뿌린 후 다

음 달 1일 새벽에 남하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은 다음 달 1일 오전에 비가 그치는 반면 남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강원영서, 충남, 서해안 20~120mm 이상, 나머지 지역은 10~40mm다. 특히 30일 오전에는 서울, 경기, 강원영서 등 중북부 지방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기

가 매우 불안정해져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계속된 가뭄을 해갈하려면 전국적으로 18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하는 만큼 이번 비로 가뭄이 해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마전선은 다음 달 5일 다시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김윤중 기자 zozo@donga.com

주말 장맛비 '해갈' 될까

천둥번개 동반 많은 비

내달 1일에 다시 남하

이번 주말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려 가뭄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8일 “30일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지방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한랭 건조한 공기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만나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비는 29일 낮부터 제주도와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30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일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해 중부지방은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권 일부 지역의 경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다.

이번 비가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말 서울·경기·강원영서·충청남도 서해안에 예정된 비

의 양은 20~70mm 정도다. 기상청이 현재 수준에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비의 양인 100mm에는 모자라는 양이다.

기상청은 보통 강수량이 평년 대비 70%에 도달했을 때 가뭄이 해갈됐다고 본다. 평년 강수량이 240.8mm이므로 현재 강수량인 68.9mm와 비교했을 때 약 100mm의 비가 필요하다.

그래도 서울에 비가 내리는 것은 지난 8월 2.02mm의 소나기가 내린 이후 약 20일 만이다. 이마저도 메마른 땅을 적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지난 5월부터 6월 27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에 내린 비의 양은 68.9mm로 평년(240.8mm)의 29%에 불과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강수량이 10.6mm로 평년(222.4mm) 대비 5%에 불과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가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마른 목은 적셔줄 것”이라며 “7월 5일쯤 장마전선이 재북상하면 가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장마 북상... 중부, 내일 시간당 30mm 폭우

남부지방은 오늘 낮부터 비

장마전선이 북상(北上)하면서 오는 30일(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특히 30일 오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大氣)가 매우 불안정해져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지속된 가뭄으로 토양이 건조·악화됐기 때문에 축대가 붕괴되거나 계곡과 강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장맛비는 29일 낮부터 제주·전남지방에서 시작돼 밤에는 강원·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 된 뒤 30일에는 전국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이후 다음 달 1일 새벽부터 장마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은 1일 오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강원영서·충남 서해안지방은 20~120mm 이상, 나머지 지방은 10~40mm 등이다.

박은호 기자 unopark@chosun.com

전국 주말 장맛비... 최고 120mm 폭우

기상청은 주말인 29~30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곳에 따라서는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28일 예보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29일 오전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비가 오기 시작해 이날 밤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고 토요일인 30일에는 전국에 걸쳐 내리겠다.

30일 오전에는 서울, 경기, 강원영서

등 중북부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서울, 경기, 강원영서, 충남 서해안 지방에 20~7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될 전망이다. 다음달 1일엔 장마전선이 내려가면서 중부 지방은 오전부터 비가 그치고, 남부 지방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드디어 이번주말 전국에 단비

극심한 가뭄과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드디어 반가운 비 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29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북상하는 장마 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비 소식이 있겠다고 28일 예보했다.

29일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제주도는 낮부터 가끔 비(강수량 60~70%)가 오겠고, 오후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밤에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서해안·남해안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다만 내륙지방은 29일 낮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강한 일사에 의한 지면 가열로 기온이 오를 것이다.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30℃가 넘는 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비는 30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특히 가뭄이 극심했던 중부지방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이르는 곳도 있겠다.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경기·강원영서·충남 서해안 지방에 20~70mm의 비가 내리고 많이 내리는 곳은 120mm 이상 쏟아지겠다.

일요일인 다음달 1일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잠시 비가 그치다 다음달 초부터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이번 비는 강수량의 지역 차가 매우 크고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연 기자



반갑다! 장마야

오늘 남부 시작으로 주말 전국 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29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강수량이 평년 240.8mm의 29%인 68.9mm에 불과, 104년 만에 닦힌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될 정도로 전국의 대지가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장마전선에 따른 비는 완전한 해갈에는 못 미치더라도 대지를 적시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29일 제주도부터 비가 오겠다고 28일 예보했다. 이어 오후에는 전남 해안을 거쳐 밤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전역에, 30일 새벽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서울, 경기, 강원 영서 등 중북부지방과 충남 서해안지방에서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탓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크다. 29일~다음달 1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지방에는 20~70mm (많은 곳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10~40mm 가량이다.

장맛비는 다음달 1일 오전에 서울과 경기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멈추겠지만 남부 지방에는 밤 늦게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장맛비로 이상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것이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30일 서울이 21~24도, 춘천 21~25도, 대구 21~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인 뒤 다음달 1일 서울 21~27도를 나타내는 등 평년 기온(22~25도)을 되찾겠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드디어 온다... 가뭄에 단비

장마전선 오늘 제주 상륙, 내일 전국 많은 비

기상청 "산사태 등 주의를"

오는 주말 전국에 장맛비가 예상돼 오랜 가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려 계곡물이 넘치거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29일 낮부터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강원·경북 지역을 뺀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다. 30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30일 오전 서울·경기·영서 등 중북부지방과 충남 서해안지방의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전망됐다.

29일부터 사흘간의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영서·충남 서해안 지역이 20~70mm (많은 곳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10~40mm다.

이번 비로 가뭄이 상당 부분 해소되겠지만 지역적으로 비가 많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비가 안 와 땅이 푸석푸석해졌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비가 올 경우 산사태나 축대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며 "계곡이나 강가는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피서객은 비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전선은 오는 7월1일 새벽부터 내려가 제주도 부근에 머물며 제주도와 남해안에 계속 비를 뿌리겠다. 중부 지방은 1일 오전 중 비가 그치겠다.

장맛비로 무더위도 한풀 꺾이겠다. 서울지역의 다음주 낮 최고기온은 24~29도이며 전국이 30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



지난 26일 오후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도3리 일대 논에서 소방서 물탱크차를 동원한 물뿌리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 제공

하수처리수 ‘가뭄 극복 구원투수’로

충남, 소방차도 동원 물 공급

27일 오후 2시쯤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화재진압용 물탱크차 4대가 극심한 가뭄으로 말라붙은 논에 연신 물을 쏟아냈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이 2시간여 동안 넣은 물은 눈감박할 사이에 갈라진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충남소방본부 방호구조과 김영환씨는 “비록 물이 논 바닥에 차오르지는 않았지만 오늘 작업으로 5~6일 정도는 벼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까지는 버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에도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도3리 일대에 소방차량이

동원돼 고사 직전에 처한 벼에 ‘생명수’를 공급했다.

충남지역 곳곳에서 가뭄을 뛰어넘기 위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2000여명과 소방차량 1175대를 가뭄 현장에 투입,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논과 밭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소방본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지원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9505 t의 물을 논과 밭에 뿌렸다.

천안하수처리장 등 충남지역 17개 하수처리장은 요즘 ‘가뭄 극복 구원투수’로 변신, 맹활약하고 있다. 이들 하수처리장은 하루 7만6000 t의 하수처리수를 농업용

수와 하천유지 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도내 농경지는 모두 572ha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먹는 물까지 부족해지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서산시와 홍성·예산·태안군 등 4개 시·군에 생수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지원받은 생수 6600박스를 식수 고갈 지역으로 보냈다. 충남도는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지하수 관측망 시설(14곳)의 물을 먹는 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희일 기자 yhi@kyunghyang.com

“가뭄피해 보상해 달라” 첫 신고

‘농작물 재해보험’ 고창서 접수 신고 늘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오면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보상범위에 가뭄을 포함시킨 2008년 이후 처음 접수된 사례다. 앞으로 가뭄 관련 농작물 피해 신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 25일 전북 고창의 고추 농장에서 가뭄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재해보험금 지급 요청이 2건 들어왔다고 28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2001년 3월 1일 시행됐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가뭄 보상 요청은 처음”이라면서 “피해금액과 인과관계 등을 확인한 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체 농작물 가운데 아직 수확철이 안 된 품목이 절반 정도여서 가뭄 피해 구제 요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2010년 11만 6440명에서 올 6월 22일 현재 24만 518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 농가 가운데 보험 가입 비율은 40.4%에 불과하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보험사 등도 손쉬운 보험료 인상에 앞서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등 (손해율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충남 논산시 탑정지가 두 달째 이어진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다. 메마른 지표면에 풀이 자라 마치 잔디밭처럼 보인다.

논 바닥은 거북등... 식수마저 바닥...

충남 서북부 가뭄 현장

저수율 29% 전국 최하위

모내기 못한 논 711ha

지하수 바닥...젓소도 폐사

태안 일부 식수난 발동동

충남 들녘이 두 달째 이어진 가뭄으로 타들어 가고 있다.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논이 적지 않고 모를 심은 논마저 거북등처럼 갈라졌다.

밭 작물은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수확량이 대폭 줄었다.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일부 지역은 식수난까지 덮쳤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강수량은 이날 현재 201mm로 평년 351.8mm의 57.1%수준이다. 저수율은 29.2%로 전국 최하위다. 주요 저수지 저수율은 ▲보령댐 23.9% ▲삼교호 43.1%, ▲대호호 -0.5%, ▲예당지 14.0% ▲탑정지 19.0%에 머물

고 있다. 가뭄 피해는예산, 홍성, 서산, 태안 등 서북부 지역 4개 시·군이 가장 심각하다.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은 전체 15만5,157ha중 0.5%인 711ha에 이른다. 또 모내기를 마친 1,621ha는 물 마름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사 직전이다. 서산 간척농지의 경우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바닥의 소금기가 올라오면서 모는 폐사위기에 놓였다.

“35년 농사 지으면서 이런 가뭄을 처음이며, 농사는 고사하고 이젠 먹을 물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가뭄피해가 극심한 충남 홍성군 흥동면 문당리 심재연(65)씨는 28일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지는 벼를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역장이 무너진다”며 허탈해했다.

가뭄피해는 수산업과 축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의 한 목장에서 지하수 고갈로 물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지난 21일 젓소 2마리가 폐사했다. 목장주 유모씨는 “젓소 82마리 가운데 2마리가 실산해 도축장으로 넘겼

다”며 “지난 18일부터 우물이 말라 제대로 물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태안과 논산, 예산에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환경부지정 1급 멸종위기종인 귀뚜라미도 곳곳에서 폐사하고 있다.

식수부족으로 태안군 이원면 관리마을 15가구에 대한 식수 공급이 중단됐고, 원북면의 한 요양원에서도 간이상수도가 말라 노인 20여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 가뭄이 이어지자 이완섭 서산 시장은 지난 17일 기우제를 지내기가 지했다.

충남도는 정부 예산 61억원과 도 예산 83억원, 시·군예산 83억원 등 모두 227억원을 한해대책비로 긴급 배정해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 밭 작물 물 공급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예보대로 이번 주말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가뭄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주일 이내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상당수의 논과 밭에서 수확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사진=이준호기자 junhol@hk.co.kr

"100년 만의 폭우 문제 없다"...과연?

TV조선

[앵커]

가뭄이 길었던 터라 비 소식이 반갑긴 한데, 작년의 엄청난 수해를 잊을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사상 최악의 수해를 입었었는데요. 올해 비가 내리기 전에 수해 복구는 되고 있는지, 또 수해 대책은 마련했는지 황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폭우로 경기도에서는 30여 명이 숨지고 3천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피해가 컸던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6명이 숨지고 1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던 송정동 일대는 보시는 것처럼 정상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복구시간이 10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배수펌프도 2배로 늘려 수해에 대비하고 있지만 정작 수해의 근본 원인인 소하천 정비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또다른 피해지역입니다. 인근 곤지암천이 범람해 병원 환자 등 300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장마가 당장 코 앞인데 하천 바닥을 긁어내는 수해 방지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흥우 / 경기도건설본부 하천관리팀장

"(토지)보상하고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 진도가 어렵게 진행됐습니다만, 물길을 확장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2미터 높이로 홍수방지벽을 쌓았났을 뿐 도로는 여기저기 공사중이고, 옹벽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더딘 공사에 주민은 지난해 악몽이 되살아 날 것만 같습니다.

[인터뷰] 김상기 / 주민

"주민 입장에서 지금도 불안해요. 작년같이 그런 일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런데도 경기도는 수해 복구율이 99%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홍덕표 / 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

"교량 하천 등 수해복구 공사는 100년 빈도로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공사를 추진해서 지금 현재는 99.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철저하고 꼼꼼한 수해방지 대책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V조선 황순욱입니다.

올여름, 이런 일 다시 겪지 않게... 집중호우 야간 모의훈련



지난해 7월 새벽부터 내린 폭우에 여의도 여의상류나들목 부근 도로가 잠겨 차량이 고장나고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비상사태” 선포에 6000명 일사불란



현장 행정

“오늘 오전 9시 미국 관 북서쪽 1000km 부근 해상에 머물던 태풍이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900km 부근을 지나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시간당 100mm의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28일 이 같은 상황을 가정해 오후 10시부터 5시간 동안 민·관·군 6000여명이 참여하는 ‘집중호우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자치구가 이처럼 대규모로 야간 호우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호우 피해는 주로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보다 침착하면서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8일 집중호우 모의훈련에 참가한 조길형(왼쪽 두 번째) 영등포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피해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것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기후 변화에 따른 극지성 폭우로 피해가 잇따라 공무원과 주민 모두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훈련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과 대림 1~3동 등장 및 수방대

영등포, 민관군 합동 실시 비상소집·대피소 마련 등

원, 빗물펌프장 직원 등 재난 대응 담당자 뿐 아니라 자율방재단 등 주민과 대민 담당 공무원까지 나섰다.

시나리오에 따라 구는 오후 8시부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1시간 30분 뒤 상황 판단 회의를 했다. 오후 10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조길형 구청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등 주민센터와 대림 2·3동 펌프장 직원, 긴급 구호반, 현장 복구반, 교통·정소 대책반 등 관계 공무원과 구청 14개 부서 대기조에 줄줄이 비상 문자메시지가 전달

됐다. 주민 돌봄서비스 직원 555명이 취약 위험 지역 783가구 가구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로 위험을 알리고 서울시 현장기동반에도 비상 상황을 알렸다. 빗물받이 책임자 1473명도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했다. 대책본부는 인근 군부대에도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29일 오전 1시 도립천이 범람하자 주민 대피 순회 방송을 시작하고 대영초등학교와 대림중학교에 공장 이재민 대피소를 마련해 600여명의 이재민을 재빨리 피난시키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됐다.

조 구청장은 “유관 기관의 상황 대처 능력을 높여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ny77@seoul.co.kr

중요정보

2012년 06월 29일 금요일 A22면 지역

서초구 빗물펌프장 6곳 ‘번개 사냥꾼’이 지킨다

〈낙뢰방지장치·SPD〉

피뢰침으로도 못 잡는 간접뢰 접지선 통해 빠져나가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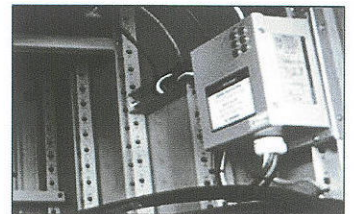
지난해 7월 27일 서울에는 시간당 최고 11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삼시간에 쏟아진 폭우에 자연 배수가 어렵자 서울 시내 100여개 빗물펌프장이 가동됐다. 빗물펌프장은 펌프를 작동해 빗물을 하천으로 빨리 내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빗물을 양제천으로 내려보내던 서초구 빗물펌프장이 이날 오후 갑자기

기 멈췄다. 원인은 낙뢰였다. 폭우와 함께 내리친 번개가 빗물펌프장의 자동운전장치 제어시스템(PLC)을 마비시킨 것이다.

펌프장 건물로 번개가 직접 내리칠 경우 피뢰침을 통해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자장, 즉 간접뢰가 주변 전선의 전압에 영향을 줘 제어시스템을 마비시켜 버렸다. 반도체가 내장된 원격제어시스템은 5V 이하의 낮은 전압 변화에도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간접뢰로 인한 피해를 없애

기 위해 서초구가 관내 7개 빗물펌프장 중 자동운전장치로 작동되는 6개 빗물펌프장에 고성능 낙뢰방지장치(SPD)를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252개를 설치했다. SPD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전압이 들어오면 접지선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해 기기 오작동을 막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낙뢰는 13만 회로 장마철인 7~8월에만 51%가 발생했다. 낙뢰로 인해 빗물펌프장 원격제어시스



낙뢰방지장치(오른쪽 사각박스)는 비정상적인 전압이 원격제어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사진 서초구청]

템이 오작동하거나 멈출 경우 자칫하면 폭우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은상 서초구 재난치수와장은 “새 장비는 7~8월 낙뢰의 10배 이상까지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혁 기자 storist@joongang.co.kr

황령터널서 '아찔한' 화재...대형사고 날 뻔

<앵커 멘트>

부산의 한 터널 안에서 화물차 등 자동차 7대가 잇따라 부딪치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화물차에는 폭발성 물질이 가득 실려있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 아찔했던 순간을 함께 보시죠.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터널 안에 멈춰선 화물차와 승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나자, 터널로 진입한 차들이 멈춰서며 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오늘 오후, 부산 황령터널에서 승용차와 4.5톤 화물차 등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승용차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화물차로 옮겨 붙었습니다.

<인터뷰> 김민기(사고 승용차 운전자) : "약한 불이기에 수습해 보려고 소화기를 찾아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도, 불이 안 잡힌 겁니다."

불이 커지면서 터널 안에 연기가 차오르자 운전자들은 400여 미터 떨어진 터널 입구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화물차에는 이처럼 인화성 물질이 가득 실려있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인터뷰> 조훈중(부산 남부소방서 화재조사계) : "액화 산소라든가 암모니아 같은 게 실려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뒤쪽으로 완전히 연소가 되기 전에..."

터널 안 화재로 차량 통행은 1시간 반 동안 전면 통제됐고, 이 일대 교통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북창동 식당서 또 대형 화재...6명 사상

TV조선

[앵커]

오늘 새벽 서울 북창동의 한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불길을 잡는 데만 한 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북창동 골목은 그야말로 화재 취약 지역이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물 사이로 연기가 치솟습니다.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 때문에 앞을 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1층 주방에서 난 것으로 추정된 불은 순식간에 4층 옥상까지 번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 4층 옥상입니다. 당시 화재로 옥탑방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내렸습니다. 이 불로 옥탑방에서 잠을 자던 식당 직원 47살 이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46살 김 모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길을 잡는데만 한 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60년대 지어진 건물은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판넬인데다 옥탑방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 건물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져 화재 예방을 강화한 새 소방법 적용의 사각지역입니다. 또 내부도 미로처럼 복잡해 불을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소방 관계자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밀집돼있는데는 (화재에) 취약하다고 봐야돼요. 옛날 건물들은 넓은 공간을 그냥 합판 하나로 막아서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죠. (요즘 건물과) 다르죠."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골목이 많을 뿐아니라, 건물이 아예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불이 쉽게 옮겨붙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진소자 / 인근 주민

"길을 넓혀놔야, 소방차가 들어오면 빨리 진압이 되지. 길들이 전부 이만한데, 뭘 어떻게 해. 제일 큰 문제지."

지난 1월에도 인근 유흥주점에서 불이 났지만 한 시간 넘게 불길을 잡지 못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피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역시 40년 넘은 낡은 건물이 인데다 좁은 소방로가 문제였습니다.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북창동 골목, 주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닥터헬기 고장 나 이송 지연, 환자는 숨져(종합)

(신안=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도입된 지 1년도 채 안 된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가 출동 중 고장이 나 이송이 지연돼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10시 15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에서 경운기 사고로 어깨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A(87)씨를 긴급 이송하기 위해 닥터헬기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환자 이송이 1시간가량 지연됐다.

A씨는 다른 헬기 지원을 받아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돼 뒤늦게 치료를 받았으나 골절부위에 내출혈량이 많아져 한 시간여 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 닥터헬기 거점 병원인 목포 한국병원의 한 관계자는 "비행지연으로 인한 출혈 과다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겠지만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소방헬기를 부르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출발 전 헬기 점검 시 이상이 없어 출항했으나 현장 도착 후 경보등이 들어와 안전상 운항이 불가능했다"며 "정비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고 기계의 민감성 때문인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닥터헬기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간호사가 응급장비를 갖추고 탑승해 도서 지역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내에 도입됐다.

현재 인천 길병원과 전남의 목포 한국병원에 1대씩 배치돼 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인천은 106회, 목포는 165회 운항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안전 운항을 위해 정비사가 매일, 출발 전·후 닥터헬기를 점검한다고 해명했으나 헬기 고장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제 구실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70억 들인 닥터헬기, 1년도 안돼 고장...이송 늦어 사망

Jtbc

[앵커]

70억원 이상을 들여 도입한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헬기가 1년이 안 돼 출동 중 고장이 났습니다. 환자 이송이 1시간 가량 늦춰지면서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신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8일) 오전 9시 40분쯤, 전남지역 닥터헬기 거점 병원인 목포한국병원에 신안군의 한 섬으로부터 헬기 응급출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주민 87살 김모 할아버지가 경운기 사고로 전신에 심한 골절상을 입은 겁니다.

의료진을 태운 닥터헬기가 오전 9시 59분 섬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를 넘겨받아 병원으로 출발하려는 순간 기체에 이상을 알리는 보안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륙이 어렵다고 판단한 운항팀은 전남소방항공대에 지원을 요청했고, 헬기정비기술자를 태운 소방헬기는 다시 10시 56분 섬에 도착했습니다.

출발이 한 시간 가까이 지연돼 헬기는 11시 14분, 목포한국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피를 많이 흘리는 바람에 병원 도착 한 시간 반 만에 숨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항공 설명서에는 정비사들이 와서 보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다시 떠나 하잖아요.]

응급의학전문의와 응급장비를 갖춘 닥터헬기는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를 위해 지난해 9월 인천과 전남지역 거점 병원에 배치됐습니다.

70억 짜리 닥터헬기 1년도 안 돼 고장 이송 지연 환자 숨져

70억원 넘게 들여 도입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 헬기·사진)가 1년도 안 돼 고장이 나 제때 환자 이송을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환자는 다른 헬기로 이송될 때까지 1시간가량 기다렸고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8일 전남소방본부와 목포한국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에서 김모(87)씨가 운전하던 경운기가 승합차에 부딪히면서 김씨가 골반 등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응급초음파기 등 고성능 응급장비를 탑재

한 닥터헬기가 오전 9시59분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했다. 헬기에는 의사 1명과 응급구조사 1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헬기의 엔진 경고등이 켜져 이륙할 수 없었다. 대신 119헬기가 한 시간가량 뒤인 오전 10시56분쯤 장산도에 도착해 환자를 싣고 6분 후 이륙했다. 김씨는 오전 11시14분쯤 병원 도착 후 치료를 받다 1시간30여 분 만에 숨졌다.
목포한국병원 측은 “환자가 고령인 데다 골절이 심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닥터헬기가 정상 운항돼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면 생명을 건졌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닥터헬기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9월 들여와 보건복지부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박유미 기자, 광주=이해석 기자
lhsaa@joongang.co.kr

매일경제

2012/06/29 금
A33면 사회

전남 의료헬기 고장 이송 지연에 환자 숨져

응급 의료전용헬기(일명 닥터헬기)가 고장나 제때 이송되지 못한 환자가 숨졌다. 28일 오전 9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에서 김 모씨(87)가 경운기를 몰고 가다 승용차에 들이받혀 중상을 입었다.

곧바로 전남지역 닥터헬기 거점병원인 목포 한국병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닥터헬기는 30분이 지난 오전 10시께 도착했으나 원인 모를 보안 경고등이 켜지면서 이륙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송이 1시간 이상 지연돼 김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10분여 만인 12시 29분 사망했다.

신안/박진주 기자

[심층취재] 응급실 당직, 레지던트 대신 전문의

<앵커 멘트>

불과 몇 분이라는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진료현장, 바로 병원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이 응급실은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10명 가운데 세 명은 응급처치가 빨랐다면 살릴 수도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만큼 환자가 적합한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는 응급실 진료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응급실 복도까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침대만으론 모자라 휠체어까지 이용해 환자들을 받습니다.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건 예삿일입니다.

<인터뷰> 서향자(환자 보호자) : "2시간 만에 선생님 만날 수 있었고/ CT 촬영은 한 10시쯤에..."

우리나라 응급실 환자의 평균 체류 시간은 254분, 무려 4시간이 넘습니다.

<인터뷰> 최연숙(환자 보호자) : "순서를 기다리고 이럴 때가 보호자들은 안타까운 거죠."

심지어는 응급실에 최종 진단이나 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어서 환자가 병원을 옮겨다니다 숨지기도 합니다.

이런 폐단을 줄이도록 오는 8월 5일부터 응급실 진료체계가 강화됩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현재는 응급실 의사가 1차 진료를 한 뒤 최종 진단까지 인턴, 레지던트 등을 거치는데 앞으로는 응급실 의사가 요청하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야간에 최대 8개 과에만 당직 전문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병원의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했습니다.

대신 당직 전문의가 병원 밖에 있다가 호출을 받고 오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인터뷰> 허영주(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환자 치료 방침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응급실 문제가 한꺼번에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진료과별로 전문의가 한두 명밖에 없는 지방 중소병원들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정영호(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력을 충원한다 할지라도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절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되는 응급의료법을 어긴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인턴·레지던트 응급실 당직 못서게 한다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전문의만 당직 의사 의무화

집에 있다 호출 받고 나와도 돼

“현실 무시 탁상행정” 병원 반발

정부가 응급실 당직 의사에서 전공의(레지던트)를 제외하고 병원에 개설된 모든 진료 과목별로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직 전문의는 병원을 떠나 집에 있다가 응급 호출전화를 받은 뒤 나와도 된다. 이에 대해 대학병원과 시민단체들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대한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28일 “전문의에게 응급실 당직을 맡기되 호출전

화를 받을 수 있다면 당직 전문의가 병원에 상주할 필요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의 경우 지금은 내과·외과·소아과 등 8개 진료과목 전문의가 당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인턴·레지던트가 대신 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레지던트가 당직 의사 역할을 할 수 없고 26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당직을 서야 한다. 안과·가정의학과 등 응급환자가 거의 없는 진료과목도 당직 대상이다.

복지부는 당초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27일 의견 수렴 완료)에서 3년차 이상 전공의와 전문의만 응급실 당직의사로 제한하려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년차 전공의에만 업무가 집중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병원들도 “전문의가 야간

에 숙직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본지 6월 28일자 1, 8면)

이처럼 전공의와 병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는데다 전공의들의 파업 움직임까지 일자 복지부가 방침을 바꿨다. 전공의를 당직에서 빼 주고 전문의의 ‘병원 외부 당직 허용’이라는 편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의 대학병원들은 “비효율적이고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부산대병원 임영탁 원장 대행(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지방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숫자가 많지 않아 당직까지 하면 외래와 응급 진료 모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K대학병원 교수(응급의학과)는 “신속하게 환자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3년차

전공의면 (응급실 근무에)충분하다”며 “전공이 세분화된 전문의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B대학병원 교수는 “복지부가 응급실 진료 수가를 올리지 않고 병원들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전화 당직을 허용하면 응급의료의 질을 개선하자는 당초 법 개정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은 “병원 밖에 있는 전문의보다 3년차 이상 전공의가 병원 안에 있는 게 환자에겐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는 “응급실 전담의사가 주로 전화로 전문의한테 물어보고 (전문의가) 실제 응급실까지는 안 나오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박유미 기자 african@joongang.co.kr

朝鮮日報

2012년 06월 29일 금요일 S14면 지방

경기북부에도 ‘석해균 프로젝트’ 가동

중증외상환자를 응급헬기로 수송해 생명을 살리는 경기도의 중증외상환자 더 살리기 프로젝트가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북부청은 의정부성모병원, 명지병원과 손잡고 업무협약을 맺고 중증외상환자 후송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3개 기관은 ▲협약병원을 거점으로 하는 중증외상환자 119 응급구

조시스템 운영 ▲중증외상환자 더 살리기 구급전용헬기 운영지원 ▲구급대원 외상전문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타 중증외상환자 더 살리기 전파 및 활성화 지원 등에 합의하고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응급 환자 살리기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사가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경

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 헬기를 요청하면 중증외상 전문팀이 사고현장을 찾아 환자를 병원까지 신속히 이송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아주대 응급의료팀과 협약을 맺고 중증외상환자 더 살리기 이른바 석해균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으며 1년 동안 63명의 중증외상환자를 구한 바 있다.

오경환 기자

日서 사고 위험도 가장 높은 원전 10개

2012년 06월 29일 금요일
A10면 국제

모두 한국 동해안 방향에 위치

日 '위험 원전' 10기 한국 동해쪽 위치

가동 30년 넘은 오이원전 1·2호기, 1·2위 차지

일본에서 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10개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서해안(한국의 동해 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초당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원전 제로화'가 전국 50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도 순위를 매겼다.

정부 산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문제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원전의 가동

기간과 원자로의 형태, 내진성, 지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냈다.

이 결과 간사이전력 산하 오이원전(후쿠이현) 1호기와 2호기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원전은 가동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으며 지반도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3위는 니혼원전 산하 쓰루가 1호기(후쿠이현), 4위는 간사이전

력 산하 미하마원전 2호기(후쿠이현), 5위는 미하마원전 1호기, 6위는 미하마원전 3호기, 7위는 간사이전력 산하 다카하마원전 1호기(후쿠이현)와 주고쿠전력 산하 시마네원전 2호기였다.

또 9위는 다카하마원전 2호기와 시마네원전 1호기였다. 위험도 9위까지의 총 10개 원전이 모두 한국의 동해 쪽에 몰려 있다.

위험도가 높은 원전이 간사이전력 산하에 많은 것은 30년 이상 된 원전이 많기 때문이다.

그 뒤는 주부전력 산하의 하마오카원전(시즈오카현) 3·4·5호기 가이었다.

'원전 제로화'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를 본 후쿠시마 제1, 제2원전과 오나가와원전, 주에스오키 지진 때 피해가 난 니가타현의 가시와사키가리와원전 등과 함께 위험도 상위의 원전부터 폐기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폐로조치'를 신설해 원자로 폐쇄와 기술 개발을 전담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 〰

일본에서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10개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한국의 동해 쪽(일본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원전 제로화'는 28일 일본 전역의 50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위험도를 조사해 평가순위를 발표했다. 정부 산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문제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원전 가동 기간과 원자로 형태, 내진성, 지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

가장 위험한 원전으로는 후쿠이(福井)현에 있는 간사이(關西)전력 산하 오이(大飯)원전 1, 2호기가 공동으로 꼽혔다. 가동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은 데다 원전의 지반도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오이원전은 작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재가동 결정이 내려진 곳이다.

이 밖에 △니혼원전 산하 쓰루가(敦賀)원전 1호기(후쿠이현) △간사이전력 산하 미하마(美浜)원전 1~3호기(후쿠이현) △간사이전력 산하 다카하마(高浜)원전 1호기(후쿠이현) △주고쿠(中國)전력 산하 시마네(島根)원전 2호기 등이 10위권에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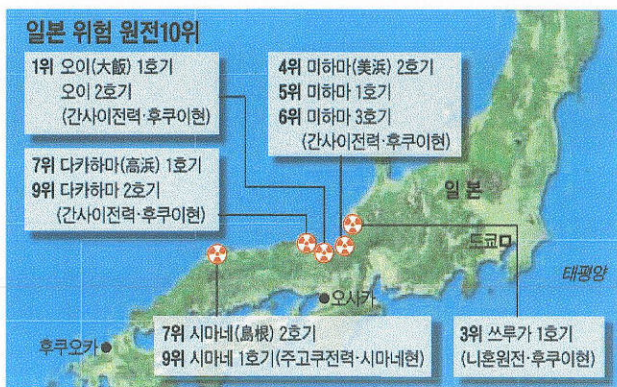
이들 위험도 10위권 원전의 공통점은 모두 동해 쪽에 있다는 것. 일본이 1970년대 이후 지진 피해가 적은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원전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원전 제로화'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를 본 후쿠시마 원전과 오나가와(女川)원전 등을 포함해 위험도 상위에 올라 있는 원전부터 단계적으로 폐기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쿄=안재석특파원 yagoo@hankyung.com

2012년 06월 29일 금요일 A20면 국제

日 사고위험도 높은 원전, 한국의 東海쪽에 몰려

초당과 '원전제로화' 순위 매겨
10위 내 모두 동해쪽에 있어
오이원전 1·2호기 공동 1위



일본 내 원자력발전소 50기 중 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원전 10기가 모두 우리 동해 쪽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 모임 '원전 제로화'는 일본 50기 원전의 위험도 순위를 매겨 28일 발표했다. 정부 산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소속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원전 가동 기간과 원자로의 형태, 내진성(耐震性)과 지반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냈다고 원전 제로화는 밝혔다.

가장 위험도가 큰 원전으로는 후쿠이(福井)현 오이(大飯)원전 1호기와 2호기가 공동 1위로 꼽혔다. 이어 3위는 쓰루가(敦賀)원전 1호기, 4위 미하마(美浜)원전 2호기, 5위 미하마원전 1호기, 6위 미하마원전 3호기, 공동 7위 다카하마(高浜)원전 1호기(이상 후쿠이현)와 시마네(島根)원전 2호기(시마네현)였다. 공동

9위는 다카하마원전 2호기(후쿠이현)와 시마네원전 2호기(시마네현)로 위험도가 높은 10개 원전이 우리 동해 쪽에 있다. 이들 원전은 가동한 지 30년이 넘었으며 지반 위험성도 큰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원전에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보다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동해 해류는 주로 북동 방향으로 흐르지만, 난류와 한

류가 서로 뒤섞이면서 발생하는 와류(渦流)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흐르기도 한다"면서 "동해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재가동하기로 결정한 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는 공동 26위였다. 가장 위험도가 낮은 원전은 아오모리(靑森)현 히가시도리(東通)원전 1호기, 사가(佐賀)현 겐카이(玄海)원전 4호기로 평가됐다.

박은호 기자 unopark@chosun.com
이한수 기자 hslee@chosun.com

거세지는 美 콜로라도 산불 주민 3만여명 긴급 대피령

공군사관학교 인근까지 번져

미국 콜로라도주(州)에서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확산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CNN이 27일 보도했다.

왈도 캐니언에서 지난 23일 시작된 산불이 26일 밤사이 강풍을 타고 콜로라도 스프링스 주택가 인근까지 번졌다. 불길이 집 앞 30여m까지 접근했을 때 겨우 집을 빠져나온 주민 크리스틴 윌리엄스는 “지금까지 이런 대형 산불은 보지 못했다”며 “내 삶이 바로 눈앞에서 불길에 휩싸여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불길이 빠르게 확산하자 이곳 주민 3만2000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인근 미 공군사관학교 내 주거지 2곳에 사는 2100여명도 긴급 대피했다. 존 히큰루퍼 콜로라도 주지사는 헬리콥터를 타고 산불 피해 지역을 돌아보며 “재난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최악의 장면 같다”고 말했다. 당국은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밤낮으로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불은 현재 5%만 잡힌 상태다.

콜로라도주에서는 27일 10곳에서 산불이 동시에 확산됐다. 북부 포트 콜린스 인근 하이 파크 지역은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로이터 뉴시스

미 공군 C-130기가 26일 콜로라도주(州) 콜로라도스프링스 인근 왈도캐니언 산불 현장에 물을 떨어뜨리며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9일 낙뢰로 시작된 불은 현재까지 주택 257채를 포함해 353km²에 이르는 토지를 집어삼켰다고 당국은 밝혔다. 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입힌 이 지역 산불은 26일까지 65% 진화됐다. 리치 브라운 콜로라도주 소방서장은 이번 산불을 ‘괴물’이라고 표현하며 주민들에게 신속한 대피를 당부했다.

산불은 콜로라도주뿐만 아니라 로키 산맥 인근인 유타와 와이오밍 몬태나 주에서도 발생해 해당 지역에 산불 적색경보가 내려졌다. 당국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8만4000명 이상의 소방 인력과 소방차 578대, 헬리콥터 79대를 투입한 상태다.

이송원 기자 lssw@chosun.com



 기고

물 부족, 해결책은 있다

고 문 현 승실대 법과대학 교수

거복 등처럼 갈라진 밭에 누렇게 떠버린 잎사귀. 5월 초부터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전국의 강수량은 평년의 36%, 6월 상순에는 32.9%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5월과 6월 상순에 내린 비를 합쳐도 한차례 소나기 양에 불과한 10mm밖에 되지 않는다. 이달 말까지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이런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계절별 강수량 편차가 커 가뭄의 위험에 항상 시달려왔다. 강수량이 한 여름철에 편중돼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연재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러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경제개발과 함께 양적 규모면에서 상수도 보급은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 그 결과 전 국민의 94% 이상이 상수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물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급수 보급률은 56%에 불과해 220여만 명의 국민이 맑고 깨끗한 상수도의 혜택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실제 이번 가뭄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지역도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지역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댐이라는 큰 물그릇과 댐 물을 필요한

지역까지 대규모로 운반할 수도시설(광역상수도)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는 1980~1990년대에 인구가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건설돼 가뭄 등의 자연 환경과 관계없이 양질의 물을 필요한 지역에 적시에 공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팔당댐 물을 이용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는 서울 및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지역 평택, 안성 등 수도권 27개 지역에 장거리 공급 망을 통해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상수도의 혜택으로 수도권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가뭄에 견딜만하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해 가뭄에 상당히 취약하다. 농어촌 지역까지 광역상수도를 확대 보급하려면 많은 투자비가 소요된다. 물을 먼 거리로 이동시키기 위한 광역상수도 시설은 거대한 여과장치와 물을 보내는 수도관·펌프·전기설비 등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들로 구성되며 거리가 멀수록 막대한 투자비용과 관리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수도법에 의하면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물값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행정적 고려에 의해 실제 투입된 원가

조차 회수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 광역상수도 물 값은 필요 비용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로 인해 물 낭비를 야기하고 수질개선 투자 및 급수보급 확대 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물 값은 전기요금의 16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물가에 영향이 거의 없음에도 물가안정을 해결까봐 또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인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까봐 인상이 억제되고 있다. 그러나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제한 물 값이 역설적으로 국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물 값 수준은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실 농어촌지역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가뭄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의 확대 보급 이외는 다른 대안이 거의 없다. 즉 우리 몸의 동맥과 같은 광역상수도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을 때 가뭄 등으로 물이 필요한 지역은 약간의 시설만 설치하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설들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물 값이 인상돼야 한다.

우리가 제값 내고 물을 사용할 때 물의 적절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물이 필요한 지역까지 물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가뭄 역시 천재(天災)가 아니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적절한 물 값을 납부할 때 물의 수급관리와 함께 가뭄도 가법계 펼쳐버릴 수 있다. 정부는 가뭄 극복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물 값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과감한 정책을 펴야한다. '싼 게 비지떡'이란 말, 정말 명언이다.

※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달 1일 세종시 출범... 유한식 시장·신정균 교육감·송기섭 건설청장

“세종시가 국가 주요 의사결정 중심축 될 것”

“2020년까지 세종시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어렵게 태어난 세종시가 건강하게 크려면 국민과 정부가 잘 보살펴줘야 합니다.”

지난 25일 조선일보가 세종시 출범을 맞아 가진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족기능 확충과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한식 세종시장 당선자, 신정균 세종시교육감 당선자,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시의 발전방향 및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표>

◇정부 부처 일정대로 이전해야
- “연기군수에 이어 초대 세종시장까지 맡은 시(市) 출범의 산증인으로서 소감은?”

- 유한식 시장 “갖은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가 역사적 출범을 하게 됐다. 초대 시장으로서 초석을 잘 깔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기여하면서 훌륭한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 “대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이유로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에 대해 거론하는데.”

- 유한식 시장 “말도 안 된다. 만약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이제 세종시가 탄생했으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줘야 한다.”

- 송기섭 청장 “작년 11월 정부부처 이전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 중이다. 당장 국무총리실이 9월부터 이전을 시작하고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및 6개 소속기관이 연말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 인력 상당수가 서울사무소 등을 두고 잔류하거나, 장·차관이 세종시보다 서



신정균 세종시교육감 당선자, 유한식 세종시장 당선자,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왼쪽부터)이 행정도시건설청장실에서 도시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한식 “세계 최고 수준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

신정균 “과학·외국어고 설립하는 방안 추진 중”

송기섭 “정부부처 이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울에 주로 거주하면서 일하는 게 아 니라는 우려가 있다.”

- 유한식 시장 “정부부처가 세종시 로 옮기면 당연히 세종시가 중심이 돼야 한다. 세종시는 특별법으로 뒷 받침되는 만큼 부처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고 서울 잔류 인원도 최소화해야 마땅하다.”

- “중앙부처 공무원 이주를 당당길 방안은?”

- 유한식 시장 “중앙부처 공무원의 세종시 정착은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본다. 당장은 가족, 학교 등 문제로 쉽지 않겠지만 살기 좋은 명품 도시 를 만들면 정착하는 이들이 늘 것이 다. 교육환경과 정주여건 확충에 주 력하겠다.”

- 송기섭 청장 “설문조사 결과 세종

세종시 출범 일정

-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공약’ 발표
- △2004년 7월 12일 신행정수도 위원 헌법소원
- △2004년 8월 11일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연기·공주지구) 확정 발표
-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 △2005년 5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
- △2006년 12월 1일 행정도시 명칭 ‘세종시’ 확정
- △2007년 7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 △2009년 9월 3일 정운찬 국무총리 ‘세종시 수정안’ 제기
- △2010년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서 부결
-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시로 이주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의견 이 70%까지 늘어난 것으로 안다. 이 전 공무원의 정착이 원활히 이뤄지 도록 앞장서겠다.”

◇교육 등 정주여건 적극 확충

- “정주여건 중 교육기반이 가장 중 요한데.”

- 송기섭 청장 “카이스트가 77만여 m²에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한발대는 일본, 독일, 호주 등 대학과 함께 16 만여m² 부지에 글로벌 융복합유니버 시티 설립계획을 밝혀 협의 중이다.”

- 신정균 교육감 “세종시 내 신설 학교는 첨단 ‘스마트스쿨’이다. 다 만 기존 편입지역이 문제인데 단계

적으로 교육환경을 모두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업유치 대책은 있나?”

- 유한식 시장 “연기 전역이 세종시 에 포함돼 산업유치 확보가 수월해 졌다. 앞으로 기업 유치에 계속 힘을 생각이다.”

- 송기섭 청장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본 인프라, 대형유통센터, 학교문 제 등이 해결돼야 하는 만큼 이를 적 극 확충해나가겠다.”

- “충청권 3개 시·도가 공조가 중요 해 보이는데 잘 될 것으로 보는지?”

- 유한식 시장 “9부 2처 2청 등 정

부부처가 60% 정도 내려오는 세종 시가 ‘신수도’라면 대전과 충남·북 은 ‘신수도권’이라 볼 수 있다. 세종 시에서 하는 것을 빼가려 하지 말고 세종시를 우선 정상적으로 조성한 뒤 이를 발전동력으로 활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상호 협조해야 한다.”

- 송기섭 청장 “36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이 세종시에 오면 수도권 위주였던 주요 의사결정 중심축이 세종시로 옮겨간다. 3개 시·도가 공 조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 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고루 잘사는 나라 세종이 선도

- “시장이 선진통일담 소속인데다 중앙 인적 네트워크가 약해 출범 초 기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에 불리하 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 유한식 시장 “군수 시절 내가 추 진해서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세종 시 원안추진, 과학벨트 유치 등을 무 리없이 해냈다. 세종시를 성공적으 로 조성하겠다는 열정이 중요하다.”

- “세종시 발전을 위한 다짐을 말해 달라.”

- 신정균 교육감 “은 힘을 다 바쳐 세종시를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 교 육도시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과학 고, 외국어고 설립도 추진 중이다.”

- 송기섭 청장 “세종시는 국토 균형 개발과 행정의 메카가 될 것이다. 도 시는 규모보다 얼마나 살기 좋고 참 조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세종시 는 체계적 계획도시로 개발된다. 전 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고 평평한 분지지형이라 개발 잠재력도 크다. 2020년까지 세종시 를 살기 좋은 세계 20대 도시로 만 드는 것이 목표이다.”

- 유한식 시장 “균형발전을 선도할 세종시를 계획대로 추진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진행=임도혁 기자 dhim@chosun.com

정리=우정식 기자 jswo@chosun.com

서울의 77% 크기 ... 12개 부처 이전 땀 12만3600명 거주

출범 앞둔 세종시

기초단체 없는 17번째 광역시
연기군청사에 임시시청 마련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와 충남 연기군(세종시) 경계를 이루는 국도 1호선에서 볼 수 있는 도로 표지판이다. 7월 1일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최근 표지판이 바뀐 것이다. 연기군은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424개 도로 표지판을 모두 교체했다. 충남 연기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세종시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하지만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특별한 구조다.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361㎢)과 공주시(77㎢), 청원군 일부(272㎢)를 흡수한 465.23㎢(서울 면적의 77%)다. 전 화번호 지역번호는 종전 '041'에서 '044'로 바뀐다. 인구는 6월 현재 10만2000여 명이다. 올해 총리실·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환경부 등 12개 부처와 소속기관이 이전하면 12만3600여 명으로 늘어난다. 행정구역은 1읍(邑)·9면(面)·14개 동(洞)으로 출범한다.

세종시청과 교육청은 현재 조치원읍내에 있는 연기군청과 연기교육지원청 건물을 앞으로 2년간 임시 청사로 쓴다. 새 청사와 교육청은 모두 2014년 상반기 예정지(신도심)에 완공될 예정이다. 연기경찰서는 '세종경찰서'로 이름이 바뀐다. 세종경찰서는 충남경찰청의 지휘를 받는다. 벌원·검찰은 종전대로 대전지검과 대전지법 관할이다.

도시와 농촌이 혼재해 있는 세종시 성격 때문에 주민 세금 체계에 차이가 있다. 첫마을(한솔동) 등 동지역 주민들은 음식점을 열 때 내는 등 록면허세를 읍·면 지역 거주민에 비해 최고 1만2000원을 더 낸다. 또한 읍·면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건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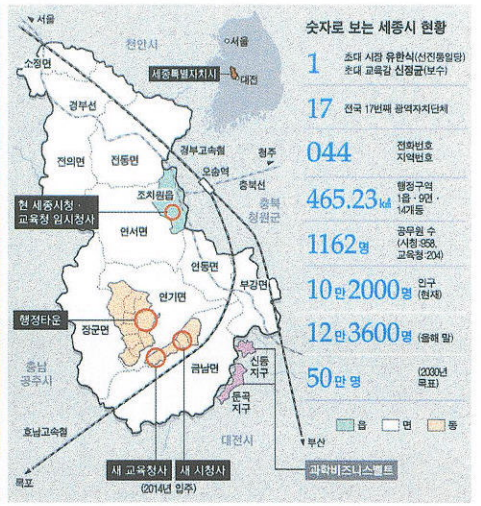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중앙행정타운 건설 장면. 중앙행정타운에는 2014년 말까지 국무총리실 등 12개 행정기관과 20개 소속 기관이 이전한다. 프리랜서 김성터

험료 농어촌 건강(22%) 혜택도 받지 못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읍·면 지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8년 이상 결직하면 면제된다. 하지만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나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특례입학 혜택도 달라진다. 세종시 첫마을 한솔고교는 특례입학을 받지 못하는 반면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고는 종전처럼 혜택을 받는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일 때 내야 한다.

유한식(63) 세종시장과 신정균(62) 교육감 취임식은 2일 열린다. 유 시장 취임식은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연기군민체육관에서 세종시 출범식과 함께 개최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신정균 세종시 교육감 취임식과 출범식이 열린다. 초대 세종시장과 교육감 임기는 2014년까지 2년이다. 세종=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zino14@joongang.co.kr

한국의 워싱턴DC, 새벽을 열다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입주계획

- 2012년(6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 2013년(6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 2014년(4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제성, 소방방재청

충남 연기군(세종시) 남면 종촌리에 있는 밀마루 전망대(높이 42m)에서 바라본 세종시 정경. 첫마을 아파트 단지과 아치 모양의 한두리 대교(금강2교)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두리 대교(880m)는 연기군 남면 나성리와 금남면 대평리 사이 금강에 놓였다. 프리랜서 김성태

내달 1일 출범, 입주 잔걸음 첫마을엔 2000여 가구 생활

4월 준공한 국무총리실 중심 C자 형태 중앙행정타운 조성

세종시 출범(7월 1일)을 3일 앞둔 28일 연기군 남면 진의리. 한국의 워싱턴 DC로 불리는 세종특별자치시 핵심시설인 중앙행정타운 공사가 한창이다.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충북 청원군 일부를 합쳐 총 465.23㎢(약 1억4000만 평), 서울 면적의 77% 수준이다. 현재 도시 건설이 진행 중인 곳은 중앙행정타운을 중심으로 72.9㎢(약 2205만 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8.6배가 된다. 세종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2002년 9월) 수도이전을 공약한 지 10년 만에 출범한다.

중앙행정타운에는 2014년 말까지 국무총리실 등 12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은 총 1만452명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총리실

을 중심으로 'C'자 형태로 지어진다. 행정도시건설청 송기섭 청장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의회와 13개 정부부처가 밀집해 있는 워싱턴 DC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12만2340㎡의 터에 17개 개별 건물이 지상 4층부터 옥상까지 연결된 하나의 건물 형태로 건설된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용의 형상을 띠고 있다.

정부청사 옥상은 대규모 '하늘정원'으로 꾸며진다. 하늘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의 총 길이가 3.6km에 이른다. 중앙행정타운 공사는 모두 5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행정타운 건물 가운데 2008년 12월 처음 착공된 국무총리실(1만3026㎡)은 올해 4월 5일 준공됐다. 국무총리실은 9월부터 12월 사이 이사한다.

국무총리실 바로 옆에는 올해 말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이 입주하는 건물(55391㎡·11월 완공)을 짓고 있다. 행정타운 주변에는 5~6개의 박물관도 집중 배치된다. 스미스나인박물관·링컨기념관 등 박물관 10여 개가 밀집해 있는 워싱턴 DC를 벤치마킹했다.

중앙행정타운 국무총리실 바로 앞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호수공원(61만㎡)이 조성 중이다. 1341억원을 들여 내년 4월 준공된다. 공유수면만 축구장 62개 크기(32만5000㎡)로 일산호수공원보다 1.08배 크다. 이곳은 지난해 초만 해도 세종시 예정지에서 가장 넓은 들판(장남평야)이었다.

주민 임지철씨는 "행정타운과 호수공원 공사 진척 상황을 지켜보면 세종시 출범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행정타운에서 남서쪽으로 2km 떨어진 곳엔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다. 아파트 단지 앞에는 급강이 흐른다. 지난해 말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 첫마을이다. 첫마을에는 아파트 6520가구가 지어졌다. 1단계 아파트 2242가구는 90%가 입주했다. 나머지 4278가구는 29일부터 입주한다.

첫마을 주민 이미영(39)씨는 "쾌적한 환경과 첨단 교육여건 등이 두루 갖춰진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했다.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에 3월 개교한 학교(4곳)는 모두 스마트스쿨이다. 등·하교에서 수업까지 학교 생활 모든 과정이 전자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스쿨 구축에는 학교당 20억원이 쓰였다.

김방현 기자 kbhkk@joongang.co.kr

한·일 군사협력 논란 끝에 첫발

정보보호협정 오늘 체결 ... 정치권선 절차 문제 쟁점화 태세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29일 오후 체결된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9일 오후 협정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서명은 일본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과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 사이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선 “여러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체결 시기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년6개월간 일본과 협정 체결을 두고 협의한 결과 국내 여론과 한·일 관계를 고려해 정보보호협정만 맺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보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과거 공산권 국가였던 러시아·폴란드·루마니아 등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일본은 25번째다.

이를 놓고 국내에선 절차에 대한 논란이 번지고 있다. 단초는 정부가 제공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와 국민여론을 수렴해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데 이어 사흘 만에 서명을 마무리하며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익명을 원한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어 핵과 미사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악화된 대일 여론이 걸림돌이다. 일본이 위안부·독도·교

각의 통과 사흘 만에 속결 “반일감정·안보는 따로 봐야”

과서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의 요청에 응해 군사협력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다. 주로 야권과 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광복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협정 체결안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치권도 정부의 추진 방식에 불

만이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정부는 약속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박 원내대표와 면담하면서 “국회와 협의 후 추진”을 약속했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일반적인 한·일 관계의 특수성과 안보이익은 분리해 볼 필요가 있고, 국회가 열리지 않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미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외교안보통 의원 10여 명에게 설명했으며, 이때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며 “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처리했다”고 했다.

서명식 이후 정치권은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과거사 문제에 일본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또 국내 여론이 반일감정과 국익을 분리해 인식하지 않는 한 한·일 군사협력이 본궤도에 오르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용수·양원보 기자
nkys@joongang.co.kr



평통사·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속속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반대 귀막고...‘한-일 군사협정’ 오늘 서명

“국회서 재논의하라” 목소리 여당서도 “총리가 취소해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의결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29일 협정 체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협정 체결을 미루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한 뒤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29일 오후쯤 (협정 체결)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서명은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일본 주재 한국대사와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

무상 사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29일 협정을 내각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늦어도 29일 오전까지는 대통령이 재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조 대변인은 “과거 체결한 12개의 유사한 협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협정 체결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 없다는 의견을 법제처로부터 받았다”며 예정대로 협정 체결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두고서는 “국방당국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부 안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아직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자로 이날 관훈토론에 참석한 정몽준 의원은 “이번 사안은 명백히 잘못됐고, 총리가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체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한 이번 협정은 무효이며, 서명 체결을 미루고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협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등 60여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체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규원 엄지원 기자, 성한용 선임기자 che@hani.co.kr

한일 군사정보협정, 청와대가 비공개 통과 주도

정부가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즉석 안건’으로 올려 비공개로 통과시킨 것은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는 중남미를 순방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 대신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통과시킨 것은, 수요일에 각료회의 의제로 상정키로 한 일본과 동시에 발표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비밀로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협정의 국무회의 상정은 실무적으론 외교부가 회의 안건을 조정하는 행안부에 요청하는 형식을 따랐다. 그러나 이 과정을 주도한 것은 청와대라는 게 정부 안팎의 정설이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주체가 돼 1년 반 전부터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을 추진해 왔고, 김태호 대외전략기획관이 실무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당초 김관진 국방장관이 5월 말쯤 일본을 방문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5월 초 언론에 보도

1년반전부터 관련 움직임 미온적인 국방부 대신 외교부로 체결 주체 바뀌

된 뒤 민주당 등 야당이 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나오자 기류가 바뀌었다. 일단 당초 목표로 했던 5월 말 체결은 포기했고, 김 국방장관은 지난 5월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면담에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협정 체결에 미온적이라고 판단하고, 협정 체결의 주체를 국방부

에서 외교통상부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29일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교장관이 협정에 서명하게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협정 체결의 실익에 대해 “수천억~수조원을 들여 얻을 수 있는 대북(對北) 정보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협정”이라며 “이미 러시아, 베트남, 루마니아와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상황에서 단지 일본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정도가 과하다”고 했다.

최현묵 기자 seanch@chosun.com



뉴스시스

지난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비밀리에 통과됐다.

인천·태백·부산·대구 재정위기 지자체 ‘경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경고 조치를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에 대해 재정건전화 계획과 자구노력을 오는 12월 재점검해 승인하기로 했다.

12월 재점검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인천은 정부가 관리하는 위기 지자체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경고로 해석된다.

정부는 심의대상에 오른 태백시에도 오투리조트 매각 등 진행절차를 보고 추후 관리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과 대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4곳의 지자체에 대해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조치 대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지를 수시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지난해 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 미만인 부산(32.1%), 대구(35.8%), 인천(37.7%)과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이상인 태백(태백관광개발공사 834.5%)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갔다.

위원회는 재정 분석 결과와 한국지

방행정연구원의 심층진단,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토대로 재정력, 채무상환능력, 중장기 추세, 단체장의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종합 고려했다.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이 제한되고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사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직도 축소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위기 단체로 지정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김경도·서동철 기자

3조 빛 있어도... “워크아웃 대상 지자체 없다”

■ 행안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 개최... ‘위기’ 지정 0곳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강원 태백과 부산 대구 인천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위기를 면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 재정 위기를 경고하는 사전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재정 위기 단체는 △재정 적자 △채무 비율 △공기업 부채 등 7가지 지

표의 기준을 정해 지정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빛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주의' 단계, 40%를 초과하면 '위기' 단계로 분류한다. '주의' 등급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위기' 단계로 지정되면 교부세가 감액되고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자 사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이상으로 '심각' 단계인 태백(태백

관광개발공사 834.5%)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어 '주의' 후보에 오른 부산(32.1%) 대구(35.8%) 인천(37.7%)이 심사를 받았다.

4월 공무원 임금이 밀리는 사태를

태백 부산 대구 인천 4곳 재무구조 개선위기 면해

겪었던 인천은 가까스로 재정위기 단체 지정을 피했다. 올해 3조304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빛이 1200억 원가량 줄어든 데다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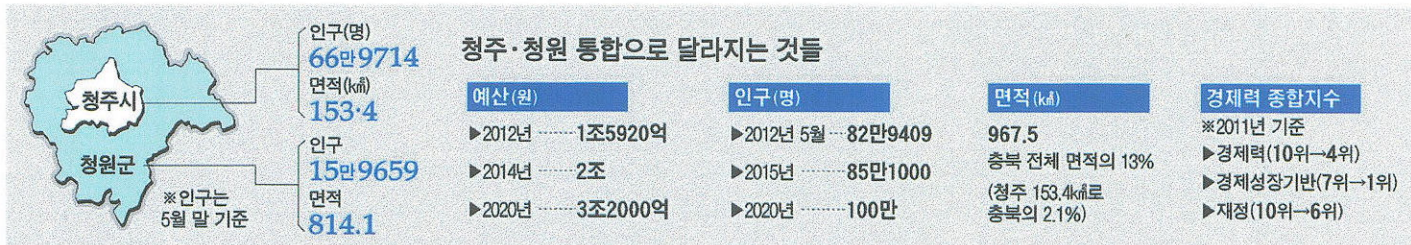
그 대신 행안부는 재정건전화 대책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아시아경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행사 경비를 추가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이나 대구는 채무감축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채무 비율이 줄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태백시는 과도한 채무의 원인인 오투리조트 매각이 진행 중인 만큼 연말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작년 9월부터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지방채가 작년 말 기준 28조2000억 원으로 7000억 원 감소하고 채무비율은 12.7%로 1%포인트 낮추는 성

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9곳에서 올해 3곳으로 줄었다.

하지만 사전경보시스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자체의 반발로 재정 위기 단체 심사가 늦어지고 대외 신인도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판단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했던 A 교수는 “정치적인 파장도 고려된 것이 사실”이라며 “자구 계획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일 기자 woohaha@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하나된 청주·청원 도시 경제력 10위→4위로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

2020년 인구 100만 거대도시 시청 위치 등 해결과제 남아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확정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발전 가능성과 위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인구 100만 명의 거대도시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27일 통합이 확정된 두 자치단체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시(市)로 출범한다. 두 시·군은 실무추진단·출범위원회를 구성한 뒤 통합시 명칭과 시청사 위치 확정, 통합시 설치법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본지 6월 28일자 1면)

통합에 따라 청주와 청원은 중부

권 최대 기초자치단체로 떠오른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두 지역을 합한 인구는 82만9409명(청주 66만9714명, 청원 15만9695명)이다.

KTX·오송역 주변 개발과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공공기관·기업 입주로 인구가 매년 1만여 명씩 증가하는 데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정부기관 이전으로 추가 유입이 이뤄지면 통합시 인구는 2020년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적도 967.5km²(청주 153.4km², 청원 814.1km²)로 늘어 충북 전체 면적의 13%를 차지하게 된다.

청주를 거점으로 오송·오창(서부권), 미원·낭성(동부권)을 연계한 도시개발이 가능해진 게 통합의 가장 큰 효과다. 도넛 구조로 둘러싸여 개발이 제한된 청주와 달리 청원은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현안과

제였다. 청주의 대규모 시설을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부권으로 이전하면 이런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이전·신축을 추진 중인 청주동물원은 통합으로 이전이 가능해졌다. 여유 부지가 많은 청원은 낙후지역 개발, 청주는 대규모 동물원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정 통합의 시너지도 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올해 1조4899억원인 청주·청원의 예산이 2014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에는 올해 충북도 예산(3조1120억원)보다 많은 3조20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통합 후 10년간 매년 17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행정 효율성도 커진다.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자치단체장, 의회 의장단 감축 등을 통해 20년간 175

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도시 경쟁력도 높아진다. 지난해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수원·성남·천안 등 전국 13개 주요 도시의 경제력 종합지수를 측정한 결과 청주는 10위에 그쳤지만 통합시의 경제력은 4위로 높아진다.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통합시청과 구청을 어디에 두느냐다. 통합 청원시에서 보듯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센티브를 얻어내는 일도 중요하다. 충북대 이재은(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으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간 균형발전도 가능해졌다”며 “두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공유하고 보완하면 중부권 거점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만삭 의사부인 살해사건 쟁점별 비교

구분	1, 2심	상고심
언제 사망했나	사망 추정 시간 등으로 따져볼 때 남편의 출근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백 씨가 집을 나선 오전 6시 41분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떻게 사망했나	남편이 침대에서 아내를 목 졸라 죽인 뒤 욕조로 옮겨 놓았다	시신 위치로 볼 때 가슴 압박으로 질식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편이 죽었나	남편의 이마와 팔, 등에서 발견된 상처가 아내의 방어흔으로 보인다	박 씨 손톱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다
왜 죽었나	게임시간 등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서로 다른 정황도 드러난다	다른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이를 곧바로 살인 동기로 추정해선 안 된다

만삭의사부인 살해 대법 “증거 불충분”

“아내 살해 단정 근거 부족
재심리하라” 파기환송

‘치과의사 모녀살해’처럼
긴 공방끝에 무죄 나올수도

임신 중인 아내 박모 씨(당시 29세)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소아청소년과 수련의) 백모 씨(32)에 대해 대법원이 “유·무죄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7년 8개월간 ‘사형→무죄→파기환송→무죄→무죄확정’의 긴 재판을 거쳤던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의 공식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이른바 ‘만삭 의사부인 살해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백 씨가 아내 박 씨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논증이 없으므로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다. 사건 자체를 원

점으로 되돌린 셈이다.

재판부는 먼저 “박 씨의 사망원인이 질식사가 아닌 액사(목이 졸려 숨진 것)라는 점이 확정돼야 한다”며 “박 씨의 시신 위치로 볼 때 가슴 압박으로 질식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액사에서만 특유하게 발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씨의 시신은 욕조에 다리를 걸친 채 머리가 욕조 안으로 들어가 목과 가슴 부위가 압박을 받는 상태로 발견됐다.

또 재판부는 “백 씨의 이마와 팔 등에서 발견된 상처를 박 씨가 입힌 방어흔(공격을 받을 때 방어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입히는 상처)이라고 판단했는데 박 씨 손톱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사망 추정 시간 등을 따져볼 때 백 씨가 집을 나선 오전 6시 41분 이후에 박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한국판 O J 심프슨 사건’이라고 불렸던 1995년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과 종종 비교돼 왔다. 의사가 아내를 죽인 혐의를 받은 데다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직접적인 살해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긴 법정공방 끝에 결국 남편은 무죄가 확정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문 연다지만... 대법관후보 임기前 국회처리 힘들듯

(7월11일)

개원 협상 타결... 내국동 사저는 '특검' 실시키로

한 달간 끌어온 19대 국회 개원협상에서 가장 논란을 빚은 것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와 각종 국정조사·청문회 개최 여부였다. 새누리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10개를 차지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9대 9로 나누자고 했다. 오랜 줄다리기에 여야 간 10대 8 배분으로 낙착됐고, 18대 때 6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국토해양위와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추가로 가져갔다. 그러나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우는 틈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임기개시일(7월 11일) 전까지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與, 국정운영 핵심 상임위장 차지**
새누리당은 다수당으로서 청와대·외교·국방·예산·경찰·언론 등 큰 틀의 국가운영과 관련된 상임위원장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국회 운영과 청와대를 맡는 운영위와 외교통상부·국방부·국정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통상통일·국방·정보위, 정부 예산과 경제·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정무위·예산결산특위, 선거·행정·경찰 업무를 다루는 행정안전위, 방송 문제를 다루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회의원 징계권을 갖는 윤리위 등이 모두 새누리당 몫이 됐다.

새누리당은 한때 지역민원 사업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국토위 대신 외통위를 야당에 내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외교는 국무(國務)인데 야당이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밀렸다. 국방위도 진보당 종북(從北) 성향 의원들의 진입을 막고 안보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여당 몫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저축은행 의혹과 방승파업 이슈 등을 다룰 정무위와 문방위원장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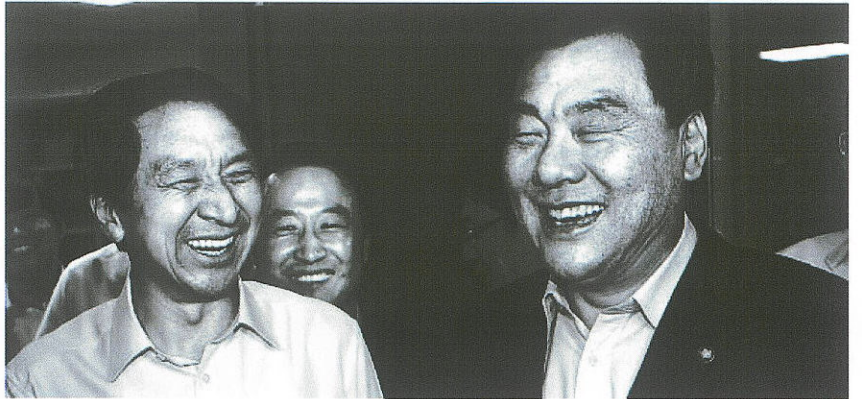
◇**'상왕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박영선 유력**
이번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법사위원장이다. 관례상 야당이 맡아왔지만, 새누

與, 국정운영 핵심 상임위 차지
외통·정보·기재위 등 10개
중복성향 의원 진입 막기 위해
국방위도 새누리 몫으로 확정
상임위원장 놓고 집안 싸움도

야당 몫 법사위에 박영선 유력
법안 본회의 상정 사실상 결정
게이트키퍼 역할 하는 '上王'
국토·복지위 등 8개 가져가

리당에선 한때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똘싸움방지법이 시행되는 19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못지않은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로만 제한되는 대신 법사위원장이 법안 자구·체계 심사를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지를 사실상 결정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 김기현(앞줄 왼쪽)·민주당 박기춘(앞줄 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회동을 갖고 19대 국회 개원(開院) 조건에 합의한 뒤 웃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유력인사들은 일찌감치 '상왕(上王)'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에 눈독을 들여왔다. 당 안팎에선 법사위 간사와 당 최고위원을 지낸 박영선 의원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적임자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원·검찰을 견제하고 각종 권력비리 의혹을 캐는 등 대(對)與 전투력을 보였다.

◇**상임위원장 치열한 경쟁**
주요 상임위원장을 누가 차지할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구성 이후 상임위원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일리아 다음 주 후반은 돼야 할 것 같고, 조정이 안 되면 경선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방위원장을 놓고는 유승민 의원과 군 출신인 황진하 의원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문방위원장은 장윤석·한선교·김태환 의원이 경쟁하고 있

국회 상임위원장 예상안

새누리당 - 10개	민주당 -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운영위(이한구) 정무위(김정훈) 기획재정위(강길부) 외교통상통일위(황진하 등) 국방위(유승민·황진하) 행정안전위(정두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장윤석·김태환·한선교) 정보위(서상기·황진하·유승민) 예산결산특별위(장윤석 등) 윤리특별위(김태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사법위원회(박영선) 교육과학기술위(신계륜·오제세) 농림수산식품위(최규성) 지식경제위(강창일) 보건복지위(주승용) 환경노동위(신계륜 등) 국토해양위(신학용 등) 여성가족위(김상희)

※ 괄호 안은 위원장 유력시되는 사람

다. 정무위원장과 기재위원장은 김정은 의원과 강길부 의원이 거론되고, 행안위원장은 정두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상임위원장은 미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지식경제위원장에 강창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주승용 의원, 농

림수산식품위원장은 최규성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은 김상희 의원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신계륜·오제세 의원, 국토해양위원장은 신학용 의원 등 서너 명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규 기자 vegas@chosun.com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이해찬 “애국가 부정하는 사람, 연대대상 아니다”

■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참석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사진)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 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그런 사고와 가치를 가진 사람은 연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내에서 선거법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겼다. 선거법 위반 사항은 상식 이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의원직 제명에 대해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제명하는 건 전 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반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시기를 9월 25일쯤으로 전망했다. 그는 “7월 25일까지 경선 규칙을 정할 예정이고 올림픽이 끝나는 8월 10일부터 45일가량 전국순회 경선을 실시해 대선후보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차기 대통령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공한

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다”고 반박했고, 안 원장과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가설정당 설립에 대해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당내 대선 주자들과 안 원장의 경쟁력에 대해선 “(당 대선후보가 선출되는) 9월 하순 어느 분이 더 경쟁력 있겠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5일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 생방송 인터뷰 도중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폭언에 대한 질문이 어지자 ‘사전 약속대로 질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은 것에 대해선 “(질문이) 조금 달라졌으면 수용했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되면 반칙”이라며 “진행자의 태도가 옳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6일 예정됐던 같은 프로그램 인터뷰를 전날 취소한 것에 대해선 “사과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출연을 취소했다. 서로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면 또 사고 날 텐데...”라고도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가설정당은 국민에 결례
9월25일께 대선후보 선출
YTN측 사과 안해 출연취소
약속 안지키면 또 사고 날 것”**

최고경영자(CEO)이고 독서량이 풍부하다. 성향이나 품성은 충분하다”며 “안 원장도 오래 지금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고 출마 의사가 있으면 국민에게 말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안 원장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만으로 된

북한 김정은 '개혁'에 나설까



서소문 포럼

강영진
논설위원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젊은 후계자 김정은이 권력을 넘겨받았을 때 국내외 관측통들은 북한이 개혁에 나설 것인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 스위스에서 9년을 보낸 김정은이라면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북한의 체제 특성과 가혹한 대외환경을 고려할 때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가장 먼저 개혁 가능성을 예측한 사람은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그는 김일성 사망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북한 체제에 맞게 채택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는 말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측근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도 북한이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자 북한 스스로 해외의 전망에 맞장구를 치고 나왔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부위원장이 1월 중순 평양에서 AP통신과 한 회견에서 “새 지도자 김정은이 지식기반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개혁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어 2월에는 북한 소식에 밝은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대표 이윤걸)가 북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8월부터 김정일 사망 전까지 노동당 조직지도부, 대외 및 경제정책 부서들, 내각 등 각 부서의 과장급, 책임부원

군들에게 “경제 문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 타임지도 김정은이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0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고 사회주의의 풍요와 부를 맘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한 대목을 두고 개혁 가능성을 전망하는 보도를 했다. 가장

리는 용어를 고수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외부의 기대와 달리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포함하는 자본주의 방식의 전면적 도입을 의미하는 ‘개혁’은 한사코 거부해 온 것이다. 그 대신 국가 단위의 중앙집중식 계획경제를 완화해 각 기업소·공장·농장에 생산과 분배의 자율권을 확대하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화’에만 초점을 맞춰 온 것이다. 이것이 북한에서 ‘개혁’과 ‘개선’의 차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의 기능을 상당히 받아들여면서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인 ‘집단주의 원칙’은 결코 포기한 적이 없었다.

이번엔 외부의 기대에 걸맞게 자본주의 방식을 본격 도입할 것인가.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위축되지 말라’는 김정은의 발언을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추진하는 ‘개선’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개선의 종착점은 결국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물론 1990년대 동유럽 국가들처럼 정권과 체제가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 대신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경제발전이 발맞춰 서서히 정치체제도 변화가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개선’은 충분히 ‘개혁’에 걸맞은 관심을 받을 만하다. 적절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긍정적 전망 속출하나 자본주의화는 아닐 것 느린 개혁이라도 관심 갖고 지원 고려할 시점

금 몇 명씩을 선발해 중국식 경제개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모든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닌 집단에 임대해 주고 연말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바치는 형식으로 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4월 중순에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김정은이 1월 28일 당간부들에게 “자본주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에 위축되지 말고 북한 경제 재건축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며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개혁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은 4월 6일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일

최근에는 동아일보가 26일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올해 초 내각 산하에 ‘경제관리 방식 개선을 준비하는 소조’가 꾸려졌고 이르면 8, 9월에 경제개혁 방안이 나온다는 기대가 높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북한 스스로 외부에 개혁을 준비 중임을 알리고 이것이 바탕이 돼 각국 언론이 앞다퉀 북한의 개혁 가능성을 높이 전망하는 상황이다.

사실 수십 년 동안 경제난에 시달려 온 북한에서 경제개혁이 화두가 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다만 개혁이라는 말 대신 ‘개선’이

‘北核’과 ‘일본 핵’이 뒤흔드는 동북아 구도 속 한국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 안전보안원이 지난 26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했던 플루토늄·우라늄 혼합 산화물(MOX) 연료 가공 공장의 추가 공사를 승인했다. 이 조치는 장기적으로 탈(脫)원전으로 간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고(高)순도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고속증식로 ‘몬주’는 유지하겠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보여 준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일 원자력기본법에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핵무장을 향한 일본의 발걸음에 거침이 없다. 핵무기를 갖기 위해 원자력기본법을 손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지 며칠도 안 돼서 핵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물질(物的) 기반까지 확충했다. 일본은 2차대전 때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原爆)이 투하된 것을 두고 자국이 세계 최초의 피폭(被爆) 국가라며 ‘탈핵(脫核) 평화 국가’의 선두에 선 것처럼 행세해 왔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접 국가를 침략·점령하고 결국은 2차대전을 도발해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었던 일본을 ‘탈핵 평화 국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런 일본이 작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전용 핵도 무섭다고 넌더리를 치면서, 한편에선 기필코 군사용 핵을 손에 넣겠다는 정신분열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이런 역지를 부리도록 만들어 준 가장 큰 핑계거리는 북핵(北核)이 제공했다. 북이 핵 보유를 새 헌법에 써 넣고 세 번째 핵실험까지 준비하자 일본 국민은 이제 북핵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 영토 위로 미사일까지 쏘아대는 북이 핵을 손에 쥐고 있으니 일본도 자위 수단을 갖춰야 한다는 극우 세력의 주장이 점점 그럴듯하다는 쪽으로 일본 국내 여론이 기울고 있는 것이다.

“조국이 불패의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이 됐다”고 주민을 세뇌하는 북의 사교(邪敎) 집단과, 북핵 공포를 국민에게 세일즈하며 핵무장의 길을 닦는 일본 극우 세력은 사실상 ‘적대적(敵對的) 상호 의존’ 관계를 굳혀가고 있는 것이다. 북의 핵 보유가 일리가 있다고 감싸고 돌았던 종북주의자들 역시 일본의 핵무장을 거드는 친일 부역(附逆)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내부가 북핵에 대한 입장이 갈려 분열하고 있는 사이 일본은 북핵을 구실 삼아 핵무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다. 북핵을 막지 못하면 일본 핵도 막을 수 없다는 동북아 안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머리와 옆구리에 동시에 핵을 끼고 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가계부채 폭탄’ 대선 정국 한복판에 던져지나

금융감독원과 시중 은행들은 최근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원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갚게 하는 프리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부채구조를 개선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3월 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911조 원으로 1000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보다 높다. 부채의 질도 나쁘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85%로 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금융부채의 30%는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부실화할 가능성이 큰 ‘위험부채’로 분류된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는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다. 빚을 못 갚는 가계가 늘어나면 은행이 부실화하고, 정도가 심해지면 경제 전체에 위기가 온다. 이런 시나리오를 피한다고 해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직결된다. 가계부채의 43%가 집

을 사느라 빚을 진 주택담보대출이다. 돈이 풀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너도나도 집을 사느라 은행 빚을 졌다. 돈줄과 부동산을 죄면 쓰러지는 가계가 속출하고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올 수 있다. 반대의 경우 가계부채가 더 커진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부채 구조조정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번 조치의 수혜자는 주로 저(低)신용층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쪽에서 훨씬 심각하다. 비은행권 약성 채무자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하지만 부채 구조조정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가져올 수 있다. 비상(非常)한 국면이나 쓸 수 있는 예외적인 조치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 엄격한 현장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프리 워크아웃 과정을 자력(自力)으로 졸업할 경우 걸맞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정치권이다. 만에 하나 대선을 앞둔 여야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무분별한 빚 탕감 공약 경쟁을 벌인다면 정말 큰일이다. ‘버티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나라의 미래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